



[트포] 보유세 개편 후... 거래절벽 아래 숨은 강남3구 부동산 03



Economy

코스피	2257.55 (-7.91)	코스닥	794.05 (-5.05)
금리 (국고채 3년)	2.09 (-0.02)	환율 (원/달러)	1118.60 (+4.10) (5일)

올해 출산율 1%도 위태 육아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가 저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 5만명에게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임신부와 1세 아동의 진료비도 사실상 '0'원에 가깝도록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5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 40만 6200명보다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감소 폭도 2001년(-12.5%) 이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더 줄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최악에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로 무너지고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은 애초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내다본 전망보다 18년이 나 빠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대폭 낮추면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통신기자 grandtrust@]

청년 취업 넓히려 '중년 명퇴' 강요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2> 금융 일자리

금융권, 청년 일자리 위해 희망퇴직 성과따라 보상도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아 세대간 갈등 조장 지적도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긴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의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 채용으로 채우려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 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고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의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

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한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려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3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

'문재인 홈' 본격시동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행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

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기간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GH)의 주택도시보증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세종=최신통신기자 csh9101@]



"누가 왔습니까?" 5일 판문점 T2회담장에서 북한 인민군 병사가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일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

집값 상승률 낮은 노원·은평 등 12개구

강남4구·마포·용산 등 제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와 마포·성동·용산구가 후보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평균(4.92%)보다 낮은 노원·도봉·금천·강북·중랑·은평·관악·동대문·종로·구로·서대문·강서 등 12곳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는 대신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자치구는

총 12곳이다.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 가격지수다.

후보지 중 노원구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도봉구 2.15%, 금천구 2.29%, 강북구 2.44%, 중랑구 2.62%, 은평구 2.72%, 관악구 2.75%, 동대문구 3.47%, 종로구 3.92%, 구로구 4.03%, 서대문구 4.35%, 강서구 4.51%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이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ik1@]